

#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가족에 국가배상

### 소부장 펀드로 얻은 수익금 판매, 재투자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지목돼 옥살이 채십서 무죄... 뒤늦게 잡힌 진범, 징역 15년 국가, 당시 경찰반장, 불기소 검사에 손해배상법원 “원상회복 안되나 금전으로나마 위자” 대리인 “경찰은 아직도 진범이라는 주장해”

지난 2008년 8월 익산에서 일어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총 16억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3일 피해자 최모(36)씨와 모친, 여동생이 국가와 당시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 반장 이모씨, 당시 불기소 처분한 검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소속 경찰과 검사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최씨는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간 구속돼 그 기간 동안 일일 수입 상당의 손해 및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씨의 모친과 여동생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 대한민국 및 담당 형사, 검사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경찰들은 부합되지 않는 증거들에 끼워 맞춰 자백을 일차하게 유도해 증거를 만드는 등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최씨에게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도 전혀 과학적·논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불기소 결정된 담당 검사로서 권한을 행사해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법하다”면서 “불기소 처분은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가가 국민 기본권 수호를 못 할지언정 위법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진범에 대해 오히려 합리성 없는 위법

한 불기소처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 사건 불법행위가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에 의해 다신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할 막중한 필요가 있다”며 “최씨 등 피해는 원상 회복되거나 금전 환산할 수 없으나 대체 방법이 없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구금기간 최씨의 일일수입 1억8000여만원에 더해 체포·가혹행위 경위, 구금 당시 나이, 진범 발견에도 누명을 벗지 못한 경위 등을 종합해 위자료 20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원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최씨에게 총 13억 9000만원, 이모씨에게 총 13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최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셈이다. 또 재판부는 국가가 최씨의 모친에게 2억5000만원, 최씨의 여동생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경찰 반장 이씨와 불기소 처분한 검사 김씨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20%를 각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이씨와 김씨는 최씨에게 약 2억6000만원을, 최씨 모친에게 5000만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

판결이 끝난 뒤 최씨를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주장한 불법행위 대부분을 다 인정한 것 같다”며 “판결에 만족하고, 공무원 개인 책임을 인정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당사자는 무슨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소송에서 국가 측 대리인이 책임을 인정 안 한다고 해 아쉬웠고, 신중하게 불복 여부를

판단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사도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유감 표시는 했는데 당시 경찰 반장은 유감은커녕 아직도 ‘최씨가 진범이다’, ‘이미 지급한 형사보상금도 환수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 사건 최초 목격자였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최씨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유씨와 시비가 붙었으며 이 과정에 욕설을 듣자 격분해 오토바이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흉기로 유씨를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최씨는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1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0년 만기출소했다.

최씨가 재판을 받던 2003년 경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듣고 김 모씨를 긴급체포한 뒤 자백을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기각했다. 석방된 김씨는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2006년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검찰이 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심을 심리한 광주고법은 지난 2016년 11월 “살해 동기와 범행 등 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최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며 최씨의 재심 무죄 판결은 확정됐고, 최씨는 총 8억6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2017년 4월 뒤늦게 잡힌 김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뉴스



지난 2008년 8월 익산에서 일어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총 1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와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판단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사도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유감 표시는 했는데 당시 경찰 반장은 유감은커녕 아직도 ‘최씨가 진범이다’, ‘이미 지급한 형사보상금도 환수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 사건 최초 목격자였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최씨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유씨와 시비가 붙었으며 이 과정에 욕설을 듣자 격분해 오토바이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흉기로 유씨를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최씨는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1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0년 만기출소했다.

최씨가 재판을 받던 2003년 경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듣고 김 모씨를 긴급체포한 뒤 자백을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기각했다. 석방된 김씨는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2006년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검찰이 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심을 심리한 광주고법은 지난 2016년 11월 “살해 동기와 범행 등 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최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며 최씨의 재심 무죄 판결은 확정됐고, 최씨는 총 8억6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2017년 4월 뒤늦게 잡힌 김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뉴스

최씨는 이 사건 최초 목격자였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최씨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유씨와 시비가 붙었으며 이 과정에 욕설을 듣자 격분해 오토바이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흉기로 유씨를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최씨는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1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0년 만기출소했다.

최씨가 재판을 받던 2003년 경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듣고 김 모씨를 긴급체포한 뒤 자백을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기각했다. 석방된 김씨는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2006년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검찰이 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심을 심리한 광주고법은 지난 2016년 11월 “살해 동기와 범행 등 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최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며 최씨의 재심 무죄 판결은 확정됐고, 최씨는 총 8억6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2017년 4월 뒤늦게 잡힌 김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뉴스

## 민주 “같은 아픔 다시 발생해선 안 돼”

###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에

더불어민주당은 생후 16개월 정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은 사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 받아야 했던 아이의 아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남은 어른들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경찰은 아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전문부검의들로부터 재검정을 받았고, 재판 시작 직후 양모에 대해 ‘살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추가 학대의 정황이 계속 더해지고 있으며,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사망 가능성을 몰랐다가 16개월 아기에겐 너무도 가혹한 폭력

이 가해졌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8일 분회의에서는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즉시 전담 기관이 수사·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아동학대처벌법이 통과됐다.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도 통과됐다”며 “우리 사회 모든 아이 한명 한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금 부모와 떨어져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을 겪고 있을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다. 바로 아동학대의 또 다른 피해자, 정인의 언니”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아가 할 또 다른 아이의 보호 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뉴스

## ‘의회 입법 역량 강화’

###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 본격 업무 돌입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의정활동의 핵심인 정책대안 제시와 재정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 사무처 조직진단 및 개편을 거쳐 1담당관 2개팀으로 구성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입법지원팀과 예산정책분석팀으로 구성돼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업, 자치입법 제정과 집행부의 정책, 예·결산 심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법지원팀은 전문적인 입법 지원 시스템을 마련,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과정에서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해 의회 입법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동향을 파악해 도의회 차원의 선제 대응과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의원의 연구·학술단체 활동을 보장해 양질의 정책 발굴 등을 지원한다.

예산정책분석팀은 도와 도교육청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 분석

확이다. 입법지원팀은 전문적인 입법 지원 시스템을 마련,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과정에서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해 의회 입법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동향을 파악해 도의회 차원의 선제 대응과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의원의 연구·학술단체 활동을 보장해 양질의 정책 발굴 등을 지원한다.

예산정책분석팀은 도와 도교육청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 분석

및 결산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예산편성 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요 자료를 분석·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산이 적합하게 사용돼 당초 사업의 목적달성과 계획된 성과를 거뒀는지 성과의 평가·환류가 중요한 만큼 결산도 심도 있는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 본격 업무 돌입

분석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재정규모는 지난 2010년 4조1,853억원에서 2020년 7조8,262억원 대로 87%가량 증가해 지방재정의 전문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지용 의장은 “자치입법 지원과 예·결산 분석을 위한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을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의 타당성, 합리성, 예산추계 등 철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가 집행부의 견제·감시기능뿐만 아니라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제시와 함께,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민간조사 전문기업

#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 010-5636-7755

## 907호